

세금 잘 걷는 법과 고구마 줄기 캐기

“대한민국은 간접세 엄격하고, 직접세 관대한, 투기 자본가들의 천국”

국가와 국민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국민은 머릿수로서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대가로 세금을 내며 국가에 의존한다. 여기서 ‘의존’이란 기댄다는 측면보다 국가의 틀을 빌려 터전을 보장받는다든 의미다. 반면에 국가는 국민의 외형적 부피(인구)와 더불어 그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국가를 유지한다. 전투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국가와 국민은 그런 점에서 서로 우월한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병렬구조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한다. 서로 존재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병렬구조는 엉터리다. 적어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본 세금문제에서 보자면 그렇다. 한 가지 사례에서는 세금을 너무 걷는다. 기름값 얘기다. 지난 6월 기준으로 휘발유값은 연초 대비 17.6퍼센트가 올랐다. 국가가 물가상승률 목표치로 삼고 있는 수치의 세 배가 넘는다. 원유 생산국가에서 기름값을 올리니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지만 그 핑계에는 모순이 숨어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세금도 따라오르는데, 우리나라 휘발유값은 세금비중이 무려 63퍼센트에 이른다.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그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원유값이 오르면 세금도 저절로 올라버린다. 원유값이 오르는 데 편승해 국가가 예상치 않은 ‘세금 로또’에 당첨된 격이다.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은 국가의 몫이 아니

라 국민의 것인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휘발유값은 주요 OECD 가입국가들, 미국 영국 일본보다 40퍼센트 이상 비싼 형편이다.

여기서 《세금 이야기》를 열어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금으로 망하고 흥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흥한 이야기보다는 망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국가의 존립수단인 세금이 어떻게 국가를 무너뜨렸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섬뜩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의외로 많았다. 로마 후기가 대표적이다. 로마제국이 침략을 당했을 때 가난한 농부들은 집과 땅을 벗어나 침략자들 편에 가담했다.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에 짓눌려 사느니 울며 겨자먹기라고, 침략자 편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결국 침략자가 제국을 붕괴시킨 게 아니라 세금이 제국을 붕괴시킨 셈이다.

로마뿐 아니다. 우리 역사의 저편, 고려시대 사람들 삶 속에는 죽음이 있다. 경상도의 한 농민이 가산을 다 팔아도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죽음을 택한 기록이 《고려사》에 나와 있으며 여미현(餘美縣)의 한 관리 역시 징세부담이 너무 가혹하여 자살했다는 기록 역시 나와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걷어야 하는 징세관리가 죽음을 택했으니 그것은 엄연한 국가의 타살행위와 같다.

여기까지 보면 국가는 세금을 마냥 적게 걷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병렬구조의 두 번째 엉터리가 등장한다.

7월 중순 복더위 중의 하루, 아주 뜨거운 뉴스가 나왔다. 우리 국민 상위 1퍼센트가 나라 전체의 사유지 중 51.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상위의 최고 땅부자 100명이 1인당 평균 115만 평의 땅, 즉 510억 원어치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소유한 땅의 크기는 서울시 면적의 60퍼센트에 달한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땅이 5퍼센트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 소유의 땅 51.5퍼센트 중 상당수는 투자용이 아니라 투기용에 가깝다는 사실이 여기서 증명된다.

● 이 글을 쓴 임동헌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역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아가에게》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자를 거쳐 〈출판저널〉 주간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최근 소설집 《별》을 냈다.

투기용 땅이 거대하게 움츠리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존립 가능할까. 더구나 2,30년 전부터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애쓴 나라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또한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넘어온 지 3대째 된 나라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답은 한 가지다. 국민 누구에게나 전가할 수 있는 간접세는 아낌없이 거두면서 투기 세력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세를 담당하게 매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한민국에서 실거래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세목은 부동산 한 종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라도 투기 세력화할 수 있는 51.5퍼센트의 땅을 소유한 땅 주인들에게 그 많은 땅을 가지고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는 것은 단적으로 세금이 적다는 것을 뜻한다.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간접세에는 엄격하고, 직접세에는 관대한, 투기 자본가들의 천국인 셈이다.

다시 《세금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 책의 저자 전태영 씨는 우리나라가 2003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의 부패지수에서 4.3점을 받은 나라라고 개탄하고 있다. 조사대상국 133개국 중 50위를 차지했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부패를 낳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 시스템 중의 하나에는 부실한 직접세 운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간접세는 국민 누구에게나 철통같이 적용되므로 부패 여지가 작지만 직접세는 특정한 대상이므로 언제나 융통성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자주 내세우는 이야기 중에 분배정의를 빼놓을 수 없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이상적이고, 그래서 '강남을 잡겠다'는 이야기에다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강남을 잡겠다'는 것은 관념의 의지다. 관념으로 강남을 잡을 수는 없으며, 강남은 국민의 적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강남적인 요소들이다. 그 강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직접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올리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거둘 것인가에 있다. 그 반대편에는 바로 간접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내릴 것인가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을 빌려야 하는 요소다.

세금문제에 관한 한 《세금 이야기》는 오늘의 국가에 타산지식이 되지만 현실과 밀접한 사례로 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징성인 셈이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현대국가의 세금구조에 있어서 무엇이 엉터리인가를 확인하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은 고구마 줄기를 따라가듯 하는 방법이다. 고구마 줄기를 캐보면 고구마는 물론 흙 알갱이까지 모두 달려 나온다. 세금구조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그보다 확연히 알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고구마 밭에 가서 혼자 되뇌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금 경영자들이 《세금 이야기》를 옆구리에 끼고 들어야 할 이야기다. **【부록】**

